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2021년 4.7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합니다.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은 정치 역학관계 위주의 보도가 아니라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2021 서울 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 보도 모니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의 올바른 선거 보도를 위한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마희 사무처장(010-8789-01214), 언론노조 조영수 정책실 부실장(010-3239-3279)

## ■ 기자회견 차례 ■

사회 : 조영수 언론노조 정책실 부실장

### 1. 상임공동대표 인사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 2. 조직 구성 경과 및 활동계획 발표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신미희 집행위원장)

- 모니터 계획 발표(민언련 임동준 정책모니터팀장)

- 포털 모니터 계획 발표(언론노조 이준형 전문위원)

### 3. 선거보도준칙 발표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4.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 5.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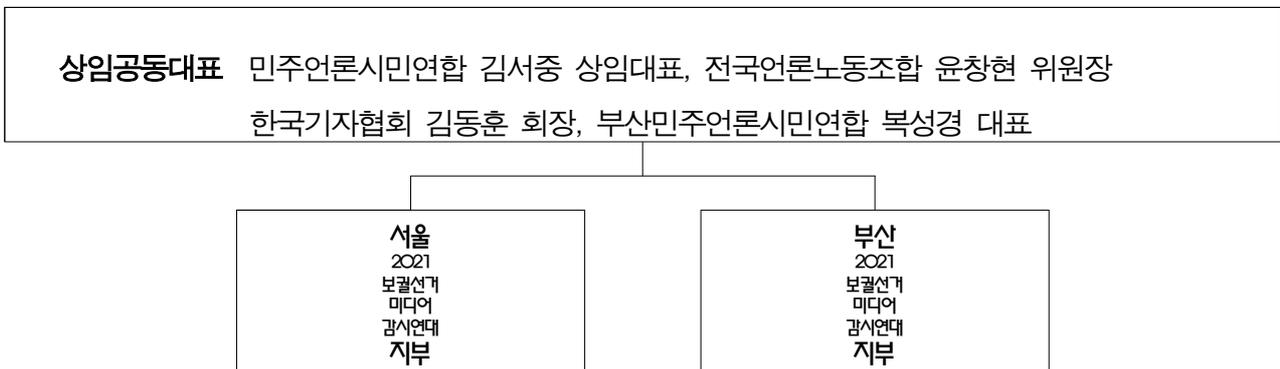
# 조직 구성 경과 및 활동 계획

## 1. 발족 경과

일정	내용
1월 15·18일 2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사전 회의
2월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결성 제안을 위한 논의
3월 4일	'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발족을 위한 언론·시민단체 1차 대표자 회의
3월 10일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 개최

## 2. 조직 명칭 및 구성

- 조직 명칭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 조직 규모 언론 현업 및 언론시민단체
- 상임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 상임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복성경 대표
- 집행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
- 전국 조직망



○ 연대단체 (17개 단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새언론포럼, 부산참여연대,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부산대표자회의,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 활동 일정

일정	내용
3월 8일	2021 보궐선거 미디어감시 시작
3월 10일	2021 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
4월 7일	2021 보궐선거 투표일

## 3. 활동 내용

### ○ ‘선거보도준칙’을 선거보도의 기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많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거보도를 감시해왔던 ‘선거보도감시연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중심으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계속 ‘선거보도감시준칙’의 틀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거보도를 비평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8년 전국 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당시 이 틀에서 벗어나고자 선거보도감시준칙에 “■보도해주세요!”와 “■보도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언론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도를 하길 바라는지, 어떤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당시에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것만은 하지말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에서는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선거보도감시준칙’이 아닌 ‘선거보도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기자 및 PD, 미디어 노동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보도(또는 게시물)을 제작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선거보도준칙을 만들어 미디어노동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앞서 제정한 ‘선거보도준칙’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감시연대의 ‘선거보도준칙’이 언론이 선거보도를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포털모니터에 집중하겠습니다.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신문·방송뿐만 아니라 포털도 감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뉴스 소비문화가 급변하면서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포털이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편파적으로 뉴스를 배치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상수도를 통해 오염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의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100만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선거보도 감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신뢰받는 모니터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주요 6가지 정책(부동산, 성평등, 고용노동, 공공의료, 복지민생, 미디어) 관련 선거 보도를 모니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칙 역학관계 위주의 선거보도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 유권자·시민 중심의 선거보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전문 모니터 인력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대해 공신력 있는 모니터 보고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4. 모니터 활동 계획

### 1) 서울미디어감시연대 모니터 계획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에 대한 공정성, 균형성, 형평성 준수 감시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허위조작보도, 혐오표현보도, 악의적 왜곡보도 감시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공약 및 정책 검증 보도 감시
- 주요 선거이슈 및 쟁점에 대한 유권자 중심의 미디어 보도 감시

모니터대상	방법/내용	기간
△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 저녁종합뉴스  △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제휴 54개 언론사  △ 포털사이트 네이버 제휴 언론사  ※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보고서 : 1주 단위로 발행</li> <li>△ 주간 오보, 왜곡보도 정리</li> <li>△ 주간 5개 주요 정책 관련보도 분석 (부동산, 고용노동, 복지민생, 성평등, 공공의료)</li> <li>○ 이슈 보고서 : 선거 상황에 따른 이슈 보도 분석</li> </ul>	3월 8일~ 4월 7일

## 2) 포털 모니터 계획

- 서울시장 후보 및 공약 검증 보도
- 포털 뉴스서비스(네이버)를 통한 이용자 시민의 선거 관련 보도 이용 행태 조사
- 각 후보와 정당의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침해 행태 감시

모니터대상	방법/내용	기간
△ 네이버와 뉴스채널제휴를 한 언론사 중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언론사 △ 네이버 랭킹뉴스 중 해당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5위 안에 드는 선거 관련 보도	○ 정기 보고서 : 매주 월요일 비평 칼럼 작성 및 연재 - 선거에 관련 있는 뉴스만을 모니터 원이 필터링 후 내용분석 항목에 따른 해당 뉴스 분석	3월 8일~ 4월 7일

### (1) 포털 모니터 계획 해설

#### ○ 목적

첫째, 한국 저널리즘의 품질을 평가하고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장 보궐선거라는 국면은 정치권과 시민, 그리고 저널리즘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저널리즘은 시민과 정치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들을 종합하고 숙아내며, 시민 의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미디어 감시연대는 포털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널리즘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주제와 취재원, 관점 등을 택하고 있으며 심층성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저널리즘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국 저널리즘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포털은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포털은 뉴스를 단지 늘어놓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유형의 기사를 읽도록 만들고, 언론에게도 그러한 유형의 기사를 쓰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중대한 선거 국면에서 포털에 의해 시민들에게 어떤 뉴스가 추천되고 읽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은, 포털이 언론과 시민에게 중용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특정한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속보성 기사들이 주로 ‘많이 본 뉴스’에 올라있다면, 우리는 저널리즘의 낮은 품질에 대해, 언론뿐만 아니라 포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방법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중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언론사들의 기사 상위 10개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매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의 주제, 기사 속 실명 취재원의 숫자, 이해 당사자의 다양성, 관점의 복합성, 기사의 심층성, 직접 인용 대상자, 인용된 미디어의 종류. 이에 대한 논평을 매주 한 차례의 칼럼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분석의 결과도 공개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주일 치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 '많이 본 뉴스'란에는 선거판의 이벤트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옮기고, 라디오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속보성과 화제성에 치우친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들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제에 관심을 보인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포털의 기사 배치가 속보성과 화제성이 높은 기사들을 높은 순위에 오래 배치해,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선거 국면 내내 이러한 뉴스들이 생산되고 배치되며 읽힌다면, 언론이 민주적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포털이 언론과 시민 사이의 공정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디어 감시연대는 지속적인 분석과 보고를 통해, 언론과 포털 모두에 경종을 울리고, 더 나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3) 부산미디어감시연대 모니터 계획

모니터대상	방법/내용	기간
△ 부산지역 5개 언론사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 정기 보고서 : 주1회(매주 화요일) ○ 기획 모니터 : 젠더 이슈 등 선거 이후 기획보고서로 정리 및 발표	3월 1일~ 4월 7일

### 4) 정책자문단 구성

- 부동산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성평등 : 제안중
- 고용노동 : 민주노총 정책실
- 공공의료 : 제안중
- 복지민생 : 제안중
- 미디어 : 송경재(민언련 정책위원)

## 4. 미디어감시연대 홈페이지

<http://www.ccdm.or.kr/xe/vote>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보도준칙

## 1.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한다 (7)

△ 선거보도는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총선이 실시되는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또는 방송하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 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 타락 선거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정확한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인터뷰 또는 인용 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발언자의 의도와 어긋나게 보도하지 않는다.

△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2. 적극적인 검증 보도를 한다 (6)

△ 선거보도는 특정 후보에 대해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기계적 균형에만 치중하거나, 양시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 학력, 경력, 병역, 납세, 재산, 전과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 도덕성, 일관성, 공직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에 입각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주도적 검증 노력을 철저히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는 두 사람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언론사의 논쟁이 있을 때에는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 금권 선거실태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집요하게 추적 보도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적극 검증해 같은 기사 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주장일 경우 보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3. 유권자 중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한다 (4)

---

△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론조사를 기획할 때는 후보자 지지도 이외에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설문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선정적 경매 중계식 선거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할 때는 후보와 정당에서 제공한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은 자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 서서 타당한가 살펴본다. 정당과 후보자 측의 자원조달방안과 이행 방법 등의 실현가능성도 평가한다. 단,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유명세나 인지도 등에 기반한 촌평(gossip), 각 후보자나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 형 유세 보도는 자제한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 등이 연예인인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

---

### 4.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10)

---

△ 선거 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신진 후보나 소수 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다수당 및 소속 후보, 인지도 높은 후보들과

소수 정당의 후보자 간 양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올바른 정치 문화 창출에 도움이 될 신진 세력과 사회적 소수자 그룹, 여성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다.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미 있고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한다.

△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 후보를 무분별하게 이색 후보로 다루거나 이색 후보들과 함께 촌평거리로 다루 그들의 정책과 공약이 흥밋거리로 전락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온라인 세대의 선거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장치를 다양화한다.

△ 자원 봉사형 선거운동 등 새롭고 긍정적인 선거참여의 양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또한 선거참여와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기획보도를 추진한다.

△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다.

△ 선거 관련법을 수시로 해석하며 고지한다.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정 선거 참여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개편,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 새로운 선거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이해와 주권 행사를 돕는다.

## 5.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보도한다 (6)

△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지면·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관련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특정 이슈가 진실이라고 판단되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양적 균형만 맞추지 말고,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한다. 그러나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나 소명기회를 준다.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알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매체의 보도를 알릴 때에도 거듭 사실 확인을 위해 언론사는 최대한 노력한다.

△ 선거일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한다. 특

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공직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 6. 선거여론조사 준칙을 숙지하고 부합하는 보도를 한다 (5)

△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한다. 조사결과가 갈등적 사안의 한 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해서 해설하지 않고 수치 중심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며, 후보자 캠프와 선거전문가의 선거전망과 판세 분석 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 인기투표·모의투표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사 여론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현저히 다른 여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시각자료(그래프, 그림, 표, 동영상, 사진, 각종 이미지)는 프레임이나 색조, 각도 등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인지적 정서적 판단과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시각자료를 통해 경쟁자나 경쟁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보도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시청자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7.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8)

△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각종 보도자료, SNS나 블로그, 댓글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따옴표로 단순 인용 전달하는 보도 방식을 지양하고, 그 근거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한다.

△ 익명의 정보원·취재원에 의존하는 보도는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가짜뉴스의 확산 및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되,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데스크와 상의 후 가명 또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단,

불가피하게 익명(또는 가명)을 쓰는 경우에도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 취재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 또는 녹화는 방송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 녹취 또는 녹화 내용을 방송에 사용할 경우 취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사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 기사 제목만을 읽는 일명 ‘제목 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발언에 의존하여 유권자들의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제목,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제목 등을 달지 않는다.

△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방송 내용의 변경이나 방송 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히 대응한다. 대응 결과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보도를 한다. 사실이 아니지만 반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반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혐오표현<sup>1)</sup>,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방송 화면이나 보도 사진의 경우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를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의 경우 군중의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 정당의 단순 동정을 보도 또는 방송할 때 특정 후보자 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유세 장면 등을 내보낼 경우 군중 규모나 반응은 당시 최대치를 촬영,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8.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정치혐오 조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4)

△ 경마식 중계보도 금지 :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여론을 중심으로 선정적 경마 중계식 선거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를 게임이나 스포츠경기,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표현을 삼간다.

△ 지역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우선 지역주의 선동과

1)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사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적 토론의 장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적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연말연설·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제정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 중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학연 위주의 득표 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하지 않는다. 지역감정 또는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각 정당의 발표나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보도하되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

△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 금지 :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 냉소와 불신, 혐오를 심화시켜 민주주의와 참여의 위기를 불러올 정치 혐오주의 조장보도를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과열되었거나 불법 선거운동행태가 문제일 때에는 혼탁한 현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적 행동을 지목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의 이합집산만을 부각하는 보도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갖는 정치 개혁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혼란과 분열로 묘사하지 않는다.

△ 혐오표현 보도 금지 : 선거 시기에 많은 후보자들은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는 일환으로 혐오표현을 한다. 이념 대립 및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하게 된다. 선거보도는 이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유권자의 비합리적 정서나 편견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1년 3월 10일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에 참여한 7개 언론 현업 단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양심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에 선택을 돕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와 방송을 위해 제정된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선거보도준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 모두를 위한 선거보도, 정치 선행보다 정책을 묻는 보도를!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보건·안전에 대한 불안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에 맞닥뜨렸고, 해고된 노동자와 폐업에 직면한 시민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제시와 젠더 관련 정책 제안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시민들의 후퇴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부산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언론의 역할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론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비평하고, 후보자들에게 정책 철학을 물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또 유권자가 직접 묻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 의문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의 눈으로 불평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이하 2021 미디어감시연대)’를 결성합니다. ‘2021 미디어감시연대’는 정치 역학관계 위주로 보도하던 기존의 선거보도 관행을 바꾸고 정책과 유권자 중심의 선거보도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문제가 있을 시 비판할 것입니다.

‘2021 미디어감시연대’는 전국 일간지 6개사와 부산지역 일간지 2개사,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제휴 54개 언론사를 모니터 합니다. 또 포털을 통한 선거보도도 감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포털이 뉴스 소비의 주요한 통로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의 편파적인 뉴스 배치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포털 속에서 선거 관련 보도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나아가 이런 알고리즘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이미 선거판의 이벤트를 단순 전달하거나 속보성과 화제성에 치우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제에 관심을 보인 기사는 드물었기에 선거보도 감시는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치러지는 4.7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며 정치적 유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권심판론 대 안정론’이라는 프레임 안에 유권자를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더 이상 이런 보도를 원치 않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줄 진짜 서울부산시장이 누구인지 다양한 가치와 분석을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원합니다. ‘2021 미디어감시연대’가 선거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고, 기자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2021 서울·부산시장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새언론포럼, 부산참여연대,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부산대표자회의,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17개단체)